

# “아이들 먹거리 건들지 말았어야”

민주 신정훈 의원실, 내년 농식품부 예산 분석 결과

정부, 초등생·임산부에 농산물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사업 폐지될 경우 국산 농산물 수요기반 축소 자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나 임산부에게 국산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 폐지될 경우 국산 농산물 수요기반 축소 자명”이라며 예산안에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예산안에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은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과 국산 청절과일 소비확대 등을 위해 지난 2018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국립농업기술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

지원 사업은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국민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는 먹거리 정책이다.

올해에는 이들 사업에 각각 72억원과 158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도 같은 규모의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지난해 올해 예산안 확정할 때 자신들이 추진한 대표적인 민생 예산에 이 두 가지 사업을 성과로 흥보했던 국민의힘은 운석열 정부의 두 가지 사업 전액 삭감에 입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빈관 신축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쏟아부려 했던 운석열 정부가 아이들과 임산부 먹거리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라며 “아무리 전 정부 사업을 지우고 싶더라도 아이들과 임산부 먹거리는 건들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 사업들이 폐지될 경우 국산 농산물 수요기반이 축소되며 농가에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민 먹거리와 농어민 안전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김이재 도의원,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지난 23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해온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만들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방안과 성공적 안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주민자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내용으로 전상식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이 주제 발표를 하였으며, 박경하 중앙대 명예 교수의 진행으로, 염영선 도의원(정읍 2), 유희성 전라북도주민자치회 대표 회장, 방상운 전북도자치행정과장, 조승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육화봉 (재)한국마애비전연구원 박사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주민자치의 법적 한계를 비롯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표준조례안의 문제점 등이 주로 논의되었는데 특히 주민자치회 구성 및 자격에 대한 문제점 등이 거론됐다.

김이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마을의 문제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거쳐 주민 스스로 문제해결을 해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며 하루빨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법령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민주 전주병 지역위, 전주시와 정책협의회

자단 23일 전주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우병기 전주시장과 김성주 국회 의원, 이병호 전주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지역위원회·전주시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시정 운영 방향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및 도비 지원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관련기사 5면

〈관련기사 5면〉

MBC, 정치권尹 비속어 보도 지적에 ‘유감’

## “대통령실 풀 기자단 촬영, 방송사들이 공유”

〈Pool〉

언론 보도 전에 SNS 등 통해 확산… KBS 등 대부분 언론이 다양한 방법으로 보도

MBC가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보도 비판에 유감을 표했다.

MBC는 “윤 대통령의 이름과 비속어 발언을 보도하는데 일부 정치권에서 비난이 있다”며 “거의 모든 언론사가 해당 동영상을 보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일부 정치권에서 유독 MBC만 거론하면서 좌표 찍기 하듯 비난하는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영상은 대통령실 풀(Pool) 기자단이 촬영해 방송사들이 공유한 것”이라며 “이 영상은 언론보도 이전에 이미 사회관계 서비스망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다. KBS, SBS 등 지상파와 대부분의 언론이 다양한 방법으로 유튜브에 클립으로 옮겨

리거나 뉴스로 보도했다. MBC는 최대한 절제해 영상을 올렸고, 어떠한 해석이나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발언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MBC는 “뉴스 가치가 있다면 좌우연하지 않고 신속·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은 저널리즘의 기본 책무”라며 “한데수 국무총리도 대정부 질문 답변자리에서 ‘명확하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가리겠습니까?’라고 밝힌기도 했다”고 짚었다. “해외 언론들 역시 자국 지도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여과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지만 국익을 명분으로 정치 권력이 언론 자유를 위축하고 억눌렀던 수많은 사례를 기억하고 있

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며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찌나”고 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되었다고 밝혔더니,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가리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MBC가 대통령이 무심코 사적으로 지나치듯 한 말을 침소봉대했다”며 “한미동맹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당파적 공격에 협인된 MBC의 행태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썼다. /뉴스1



전북 고교생 열린 토론회

전하고 ‘갑론을박’ 팀 우승

전라북도선거방송토론회가 개최한 2022 전북 고등학생 열린 토론회에서 전하고등학교 ‘갑론을박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토론회는 예산을 통과한 4개 팀을 대상으로 지난 22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4층 회의실에서 대통령 2회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논제로 열띤 치열토론을 펼쳤다.

그 결과 전하고등학교 갑론을박팀(양윤성, 이진규)이 금상, 전하고등학교 미지노선팀(정현준, 이성경)이 은상, 산상고등학교 가운데리팀(이은송, 허윤서)과 전주고등학교 사고동치팀(정현빈, 황재용)이 동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금상과 은상을 수상한 두 팀은 11월 1일 종양선거방송토론회가 주최하는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회에 전북 대표로 출전한다.

전라북도선거방송토론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 고등학생 토론회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 국회 교육위, ‘김건희 논문’에 국민대·숙대 총장 증인 채택

유기홍 위원장, “여야 간사간 합의 요청에도 이뤄지지 않아”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국민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을 증인으로 제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임홍재 국민대학교 총장 임운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등 총 11명의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민주당의 단독 채택으로 가결했다.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체 민주당 단독으로 올린 명단이 채택됐다.

김건희 여사의 학위 인증을 조사 관련 임홍재 국민대학교 총장, 김지용 국민대학교 이사장, 전승규 국민대학교 영성대학원대학교 교수 등이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올랐다.

또한 임운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과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등 논문표절 검증 조사 진행 상황과 조치관련에 대한 보고를 위해 증인으로 제택됐다.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원활한 국감을 위해서 여당 간사와 합의를 도모했지만 인터넷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당 간사와 협의테이블에 올렸던 증인참고인 요구를 최소화해서 핵심 증인을 간주하는 명단과 함께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류철호 한국 디자인트렌드학회 회장, 이운형 인천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독재적으로 해도 되는거냐”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국화방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은 토론 없이 진행한다고 재차 밝히면서 임홍재 총장 외 10인 2022년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채택 요구의건을 상정했다. 안건은 쟁의 의원 12명 중 8명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으나 국민의 힘에서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태규 의원은 “법률 폭력, 국회폭력”이라면서 “폭력에 가까운 운영”이라고 비판하자 유 위원장은 “요새처럼 아탕이 할 말이 많은 때 없다. 아탕을 과연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이렇게 꽤도 좋은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국정감사하고 인사청문회를 같이 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물고 가고 있는 상황이 과연 맞는지, 국민들이 국정감사를 쳐다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뉴스1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기금 활용 실적 저조”

도의회 예결특위, 회계연도 전북도 결산 심사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 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심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예산의 기금 활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형석(전주)은 결산심사 2일차인 지난 28일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등 소관 결산 및 예산비지출 심사를 이어갔다.

진형석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 사업들이 폐지될 경우 국산 농산물 수요기반이 축소되며 농가에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민 먹거리와 농어민 안전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 4)

은 문화체육활동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언급하며 문화예술단체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 지원과 문화유산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송승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 3)은 전라북도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의 집행잔액 발생과 보조금 반납은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지적하며 향후 성과달성을 위한 목표설정보다 사업추진 노력여부에 따라 성과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지표 설정을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환경녹지국의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보조금 반납액의 최소화를 주문했고 환경보전과 소관 사업의 홍보 부족이 보인다며 담당부서의 대안을 요청했다.

김동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 2)은 실·국별 평시야율 사업의 이월 시유와 올해로 이전된 사업비가 차질없이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 완수를 위한 담당자의 책임감을 촉구했다.

권요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 2)은 전주독립영화의 집의 사업 미추진 사유를 지적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고, 공장 및 축산 단지의 악취 문제를 지적했다.

박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 1)은 도립미술관의 도내 출신 신인작가, 청년작가의 전시 확대를 요청하며 젊은 작가들의 활동 무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승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 1)

은 옥정호의 녹조로 인해 상수

/김경수 기자

## 전주시의회 예결위, 추경 예산안 40억원 삭감

28일 본회의 상정 처리

액 30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했다. 전기버스 구매지원 사업은 광역(시외)버스는 권리 편의 있는 전북도에서 지원한 것으로 보고 요구액 29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밖에 하수관리BTI사업 운영 민간위탁금과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도 요구한 예산 일부가 삭감 조치됐다.

예결위는 지난 20일부터 4일간의 심사 활동을 통해 총 6건의 사업 예산 중 40억원 가량을 감액해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을 오는 28일 제39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추경 세출예산안 중 삭감된 사업은 한옥마을 인형극장 건립 등 6개 사업으로 삭감액은 40억 8,064만원이다.

먼저 한옥마을은 인형극장 건립은 추경 요구액 6억 2,800만원 중 실시설계에 필요한 용역비 7,000만원을 삭감하고 사업을 부지개입 후 심도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전북임진왜란사정리 및 학술총서 간행사업은 전북도에서 상정한 정신과 함께 문제점 발생시 적극 환수 조치하는 권고사항도 내용이다.

최주만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2회 추경안 심사는 초선 의원들의 열정 속에 어느 해보다 면밀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혈세가 쓰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장동에 조성 예정인 화물차동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사업이 부지매입 단계에서도 추경에 공사비까지 주기돼 있음을 지적하고, 요구

수를 30억원으로 조정했다.

## 정읍시의원들, 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활발’

도로 도색정책 개선책

폐의약품 수집장소 협력

조직개편 방안 등 질문

정읍시의회(